‘성완종 블랙홀’… 시계제로 政局

국무총리·전현직 청와대비서실장 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경제 활성화법·세월호 후속 조치·박상옥 인준 등 제동
대정부질문 ‘이완구 청문회’로 변질…중요 현안 뒷전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초토화하면서 국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은 물론 부패 척결작업이 생각대로 되기는 힘들게 됐으며 국회도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애초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8월 전까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계획했던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을 마무리하거나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청와대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 개혁·공무원 연금 개혁을 양대 우선 과제로 설정, 상반기 내에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가 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고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거명되면서 여권의 이 같은 계획은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국내에서 이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치(內治)를 총괄해야 하지만, 이 총리가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름에 따라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는 한 ‘식물총리’ 신세를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다.

15일 사흘째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은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표적이 되면서 ‘이완구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정부질문의 핵심 이슈였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과제들은 뒷전에 묻히고 말았다.

다음달까지 여야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1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조치,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대법관 장기 공백을 불러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 등도 제자리에 멈춘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리스트에 거명된 8명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결과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결할 가능성이 크고 특검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파문이 내년 총선전까지 이어지지 않나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성 전 회장의 다른 리스트나 장부가 발견돼 연루 인사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고 ‘식물 국회’가 됨은 물론 정치권의 전면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2월 10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운정회’ 창립총회에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석해 김종필 전 총리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 총리의 블로그에 실려 있다. 운정회는 김 전 총리의 역할과 공적을 기린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경남기업 압수수색…경향신문 ‘성완종 인터뷰’ 녹취파일 검찰에 제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5일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처나 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별도로 정리한 장부가 있는지 집중 수색했다.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유전개발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달 18일 이미 한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영 회의록과 재무자료를 비롯한 방대한 증거물이 수사팀으로 넘어갔다.

첫 압수수색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을 접촉 또는 조사하면서 확보한 금품 제공 의혹 관련 정보를 토대로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심복’처럼 활동한 사건 관련자 5~6명을 추려내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의원이던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이었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수행비서로 일해 온 이모(43)씨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3년 4월4일 부여 소재 선거사무소’ 등 금품 전달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동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 외에 경남기업 홍보담당 상무 박모씨와 홍보실 정모 부장 등도 검찰이 소환을 조율 중인 인사들이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재무 담당 임원이던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을 시켜 1억원을 마련한 뒤 윤씨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전달 의혹을 제기하는 전화인터뷰를 나눈 경향신문으로부터 이날 오후 인터뷰 녹취파일을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전남도, 명품마을로 관광객 유치

도립공원 브랜드화…해남 장춘마을 19억 투입 생태숲 조성

전남도가 도립공원 내 마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도립공원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80가구 171명이 거주하는 해남 두륜산도립공원 장춘마을을 첫 명품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2016년까지 2년간 19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비 가운데 시·군비는 6억7550만원이다. 올해는 10억원으로 4계절 꽃길(1km) 및 생태숲(1.5km) 조성, 특산품(버섯 등) 판매장,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 도립공원은 두륜산, 천관산, 조계산, 신안갯벌, 무안갯벌 등 5곳으로 이 가운데 구역 내 마을이 형성돼 있는 곳은 두륜산과 신안갯벌, 무안갯벌 등 3곳이다.

전남도는 도립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 기반시설 미약 등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산품 판매장 설치, 단풍나무 심기, 담장·건물벽·공중화장실 정비에 나서는 한편 대흥사, 만일암지 오층석탑 등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두륜산도립공원 랜드마크(일주문) 조성, 녹차 체험장 정비, 마을상수도 저수탱크 정비 등이 예정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U대회 사무총장, 미국 꼭 가야했나

대표단장 회의기간 ‘ UN 스포츠의 날’ 참석차 출장 적절성 논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U대회) 사무총장 일행이 북한대표단 등 세계 대표단장들이 광주에 온 사전회의 기간에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다.

15일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광주 U대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배미경 국제부장 등 2명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리는 ‘UN국제스포츠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해 지난 14일 출국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광주 U대회 국제부 직원 2명과 사진 촬영 담당 1명 등 3명이 같은 행사 참석차 사전 출국했다.

광주 U대회 조직위측은 14~17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뉴욕 UN본부에서 열리는 ‘UN국제스포츠의 날’ 행사 프로그램에 광주 U대회를 홍보할 코너가 마련돼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 일행은 14일 램케 UN 스포츠담당 특별보좌관을 만난 뒤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했고, 15일에는 UN본부 행사장에서 U대회를 홍보하는 연설(A4 2장 분량)을 비롯해 오찬 행사 등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국제스포츠기구 주요 인사 간담회 참석 일정만 잡혀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 등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14일은 광주에서 열린 대표단장 사전회의(11~15일·51개국 대표단 110명 참석) 기간으로, 행사 주관·총괄자인 사무총장과 행사담당 부장이 동시에 출국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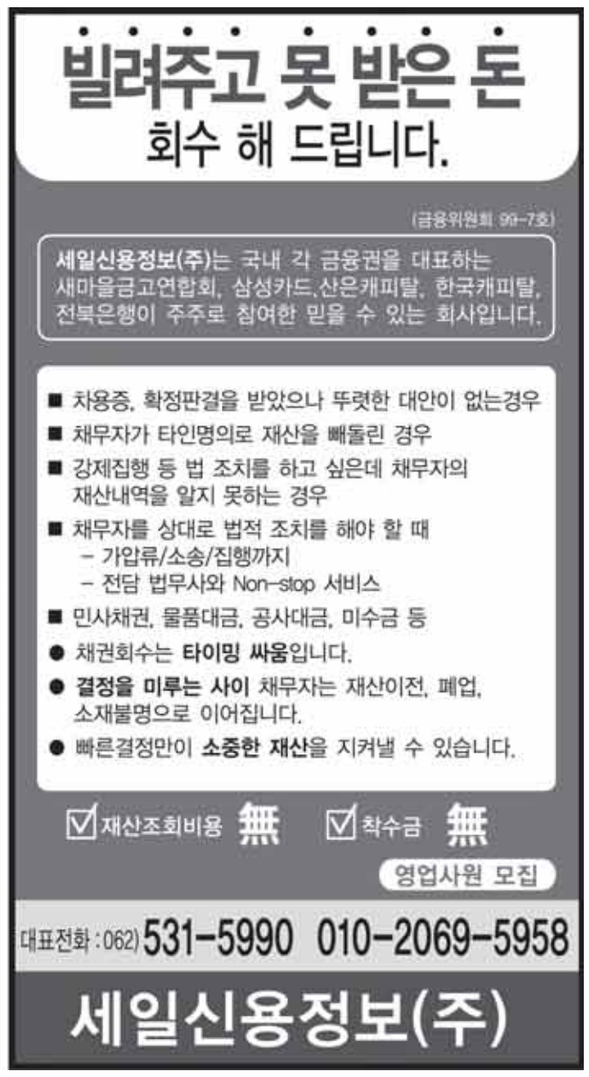
특히 ‘저비용 경제대회’를 내건 광주 U대회 조직위측이 국내 유치붐 조성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사진담당 직원까지 미국 뉴욕으로 보내는 등의 해외홍보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 법적기틀 마련해야”

이건철 전발연 원장 워크숍서 지적

광주시와 전남도가 양 지역의 상생발전 과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가 상생 협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이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 및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15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워크숍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민선 6기는 모처럼 찾아온 상생분위기 속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14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조례 제정, 실무기획단 운영, 갈등 조정기구 설립 등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chadol@